

북한 국방위 공개질문은 ‘변화 거부’의 변

통일연구원 현안연구팀

Online Series CO 12-0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김정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지도부가 등장했을 때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선은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계속성(continuity)과 안정성(stability)’에 진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즉, 수령독재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과 김정은 신지도부의 안정적인 안착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현재까지 북한의 행보는 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 2월 2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9개 사항에 대한 공개질문이라는 것도 구태의연한 선전성 주장을 통해 ‘지속성 강조’와 ‘변화 거부’를 천명한 것이었다. 신지도부의 이러한 태도는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유연화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한국정부에게는 매우 실망적인 것이다.

진부한 주장 되풀이한 공개질문서

북한이 공개질문을 통해 물은 첫 질문은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사죄하겠는가”라는 것이었다. 이는 김정일 사망에 대해 한국 정부가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조문 방북을 제한한 사실을 트집잡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김정일이 남북한을 아우르는 민족의 지도자임을 인정하라는 억지이자 조문 문제를 통해 한국사회 내부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선전책략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김정일이 생전에 저지른 대남 도발, 테러, 남남갈등 조장 등의 죄과들을 들추지 않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북한의 조속한 안정을 기대한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으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예정된 전방지역 성탄 트리의 점등도 유보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도리를 다한 셈이다.

두 번째 질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을 내외에 표명하겠는가”라는 것인데, 이는 내부선전용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11일 국회개원 연설에서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의 이행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했다.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당국자간 협의를 시작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동시에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 남북이 서명한 다른 합의들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마땅하다.

세 번째 질문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우리를 혈뜯지 않겠다고 공언하겠는가”라는 것이며, 네 번째 질문은 “우리를 과격으로 삼는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하겠는가”라는 것인데, 이 역시 선전 구호를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천안함 관련 질문은 한국사회의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대남 심리전이며, 연평도 관련 질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분쟁수역으로 남겨두기 위한 책략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12개 민간기관의 전문가 25명과 군 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위원 3명, 그리고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에 착수했으며, 합동조사단은 2달 동안의 과학적 조사를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음을 입증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북한은 한국군의 포격훈련, 즉 ‘선불질’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군은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한국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고 서해를 분쟁수역으로 남겨두기 위한 고전적 책략이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시비도 연례적 행사이다. 합동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훈련이며, 한국은 매년 북한에 훈련일정을 통보하고 참관을 초청하고 있다. 한국전쟁, 판문점 도끼만행, 아웅산 폭탄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등 북한이 저질러온 무수한 도발들을 감안하다면,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시비할 입장에 있지 않다. 전쟁과 군사도발이 없었다면 이 땅에 미군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합동군사훈련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앞세우고 한미 군사훈련을 시비하는 것은 인민군대의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한국사회의 분열을 부추기는 심리전일 뿐이다.

다섯 번째 질문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 질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김일성 유훈’이라고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란 침략자인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함은 물론 미국이 제공하는 핵억제력을 포함한 일체의 핵영향력을 배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동등한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제사회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1991년 미군 전술핵 철수 이후 한반도에 남은 핵무기는 북핵뿐이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여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는 핵보유국으로 공인받고자 하는 의도와 통미봉남의 기조가 깔려있다. 한국에게 “비핵화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되어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북한이 대등한 핵보유국 자격으로 미국과 협상하는데 들러리로 동조하라는 주문인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1992년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1994년 미·북이 체결한 「제네바핵합의(Agreed Framework)」를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핵개발에 매진하여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

했다. 1990년대 말부터는 비밀스럽게 우리나라 농축 능력을 발전시키다가 2010년 10월에는 우리나라 농축 시설을 공개하는 등 오만한 해외교 공세까지 펼치고 있다. 이런 북한이 한국에게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황당하고 혼란스럽다.

여섯 번째 질문은 “악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라는 것인데, 이는 한국 사회가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 ‘흡수통일’ 등을 언급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의미이며, 한국 정부에게 민간단체의 풍선 날려보내기 등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를 알리는 활동을 금지시키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미 수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보다는 조기 안정을 희망하고 있으며, 흡수통일보다는 평화적 합의통일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상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음도 사실이다. 한국에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문제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도 북한 스스로가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통해 안정된 체제로 발전하고 무력도발보다는 상생을 택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문제들이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활동을 시비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인권적 현실, 무분별한 대남 비방, 남남갈등 조장 등이 한국 민간단체의 대응적 활동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일곱 번째 질문은 “북남 협력과 교류를 민족의 평화번영과 공리공영을 위한 방향으로 재개하고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북한 스스로에게 있다. 교류협력을 통해 공존공영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가 추구해온 목표였다. 북한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 상생공영을 원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킨 무력도발에 대한 자기반성을 앞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은 1988년 7월 7일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이래 지속적으로 대북협력 의지를 표명해왔으며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 및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이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화·제도화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은 공리공영을 말하면서도 체제존속과 대남협박에 치중하는 행보를 지속해왔고, 그 과정에서 핵위협을 앞세운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교류협력이 중단된 것이다. 북한이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당연히 교류협력도 재개될 것이다.

여덟 번째 질문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우리의 요구에 호응하겠는가”라는 것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로는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반통일적 악법들을 철폐하겠는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부하기 짝이 없는 선전공세이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신뢰구축과 안정적인 평화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보안법 문제도 그렇다. 모든 국가는 체제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규제하는 형사법을 갖추고 있다. 독일의 형법 제84~85조, 오스트리아의 형법 제246조, 일본의 파괴활동 방지법 제9조 및 42조 등이 예이다. 미국도 정부 전복 또는 타도를 옹호, 교사 또는 고무하는 단체·집회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제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385조와 공산주의자규제법 제843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훨씬 더 가혹한 체제보위 법들을 가지고 있으며, 먹을 것을 찾아 탈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

한국 정부나 국민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원하며, 보안법이 필요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위협을 앞세운 도발을 반복하고 저속한 비방과 함께 한국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일삼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보안법을 폐지하고 평화체제에 합의하라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위하는 장치들을 해체하고 한미동맹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부터 관철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의 노동당규약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노동당규약, 조국통일 3원칙, 기타 문건들에는 남한을 수령님을 받드는 사회로 만들어야 함을 의미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외세 배격,’ 남조선 혁명을 촉구하는 ‘민족자주 정권 수립 및 민족해방’ 등의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다.

요컨대, 국방위가 보낸 공개질문이라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기 위한 대내, 대남, 그리고 대미 심리전 차원의 선전용 표현들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온 내용에 발끈할 이유도 없고 일일이 답변할 필요도 없다. 다만, 김정은 신지도부 등장 이후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기대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원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일 뿐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변화를 위한 노력 지속해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취임 이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유연성을 보이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김정은 정권이 보여준 구태연한 모습은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에 병원과 소방시설을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등 성의를 보였으며, 종교지도자 방북, 정명훈씨 방북 등 연이은 민간인 방북도 허용했다.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간염백신과 결핵약을 보냈으며, 인도적 지원 증대와 이산가족 상봉도 제안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 보장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나머지 조건들을 부수적인 것으로 다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노력에 대해 김정은 신지도부가 ‘진부하기 짝이 없는 심리전’으로 응답한 것은 무척 실망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남북관계 구축과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우상화와 체제존속에 매달려온 것은 이미 오래된 역사이며, 미국과의 핵대화에 나서면서 한국과는 핵대화를 거부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시도하거나 한국내부의 남남갈등을 부추겨 한국의 대북 지렛대를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 선거가 있을 때 세대간 간극을 이용하여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도 전혀 새삼스럽지 않다. 국방위의 공개질문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이 종래의 행태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란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 그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나가야 하는 것이 한국의 운명이다.